


2024 상반기 대회모임

# 기독교시민, 제22대 국회에 비린다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 1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종로 5가역

 YouTube


[www.youtube.com/giyunsil](http://www.youtube.com/giyunsil)


기운실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

## 문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간사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크리스찬아카데미 최고권 연구원 [tagung@daemuna.or.kr](mailto:tagung@daemuna.or.kr)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

## 사회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 a. 민생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 b. 기후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 c. 정치

천윤석 변호사, 기운실 정치운동전문위원



# 기윤실-크리스찬아카데미 2024년 상반기 대화모임 “기독교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Ⅰ 발간일 2024년 6월 26일

Ⅰ 편 집 이명진, 최고권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http://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Ⅱ 양 단체 인사말

-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 조성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Ⅲ 주제 발제

기독교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_민생

-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22대 국회

-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기독교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_정치

- 천윤석 (변호사,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

Ⅳ 전체 대화

- 양 단체 패널

Ⅴ 마무리 발언

- 다같이

# 참석자

## 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동식(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정병오(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기윤실 공동대표)

김현아(기윤실 사무처장)

신하영(세명대학교 교수)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Ⅰ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상철(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김예원(들꽃향린교회 전도사/한신대 m.div)

정유현(전 녹색당 사무처장)

차해영(마포구 구의원/민주당)

# 민생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 22대 국회에 바란다 - 민생

이은경 (재)희망제작소 소장

희망제작소

<22대 국회: 5.30 개원, 6.24 원구성>  
“민생·경제 어려움 날려달라...”  
“민생현안부터 챙기는 국회 되길...”  
“민생, 험치 국회 기대” “민생 앞에선 뜻 모아 야”

### 민생 民生

- 국민의 생활, 시민의 삶
- 납세자, 유권자, 근로자... 거주민, 이주민
- 경제, 사회, 문화적 일상을 구성하는 지금 여기, 이곳에 살고 있는 모두의 현재와 미래

희망제작소

## 민생 관련 법안들, 1호 법안, 거부된 법안...

### ■ 22대 국회 제출 1호 법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20000) 번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 ■ 각당의 1호 법안

- 민주당: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가결법안,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
- 국민의힘: 5대 분야 31개 패키지법안(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단말기유통법 폐지, 원전사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 조국혁신당: 한동훈특검법
- 1호 법안은 모두 처리 어려움: 정부여당의 반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서로의 선명성 경쟁 또는 대결을 위해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보임

### ■ 경제계 입법과제 (대한 상의) - 미래성장동력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기후위기 대응

### ■ 21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채상병특검 배우자 특검, 노조법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 민생, 민생정당, 민생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 ■ 불평등 해소, 민생 살리는 입법과제(경제 민주화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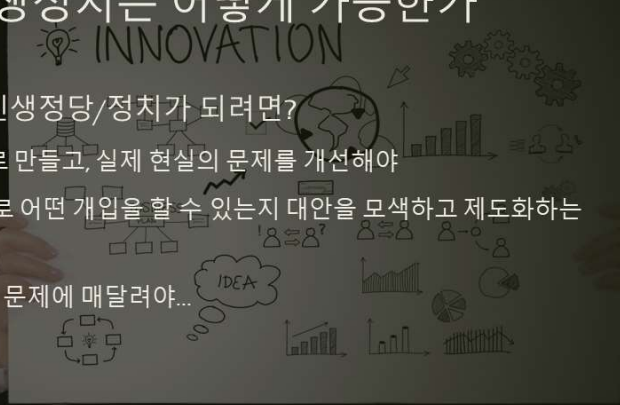
-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가계부채 및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총수 및 경영진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유통재벌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민생, 민생정당, 민생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 ■ 민생, 토론과 선언이 아닌 민생정당/정치가 되려면?

- 민생사안을 정치의 핵심의제로 만들고, 실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해야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것
- 식견·역량을 갖고 민생 현장의 문제에 매달려야...



## 주목해야할 한국사회 시민 삶의 조건들

### ■ 외로움

- 코로나19로 인한 단절의 경험
- 디지털 기술의 발전(SNS,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 1인가구 증가, 나홀로 라이프스타일

청년은 종종 외롭습니다.  
중년은 많이 외롭습니다.  
노년은 내내 외롭습니다.

\*\*\*\*\*

1인가구가 급증하고 경쟁과 불안 가득한 우리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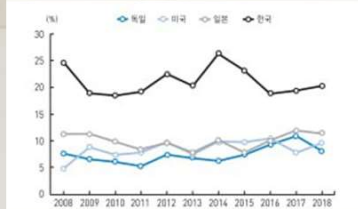


## 주목해야할 한국사회 시민 삶의 조건들

### ■ 외로움

- 1인가구 비율 증가세, 1인가구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평균보다 4.5%p 낮아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중
- 우리나라 성인 72%가 "최근 한 달간 외로움을 느낀 적 있다" 응답  
한국리서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조사(2023)
- 우리나라 성인 34%, 1인가구는 45% "나는 고독사할 가능성 있다"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고독사인식조사(2023)
-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공동체) 지수 OECD 최하위권(41개국 중 38위)  
2024 OECD 더 나은 삶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고독사 사망자 추  
이)



Q 성별, 세대별 외로움 체감도 (OECD BLI)

세대	성별	가외 항상	자주 느낌	가끔 느낌	못 느낌
1세대(497)	남	8	19	51	23
	여	6	18	52	23
2세대(175)	남	7	33	46	15
	여	11	18	45	26
3세대(203)	남	6	19	50	23
	여	7	13	58	23
4세대(248)	남	4	13	56	27
	여	4	13	56	27

출처: 한국리서치(한국리서치)

"2030세대 외로움 체감도 높고, 1인가구일 수록 자주 느끼고, 소득 200만원 이하 상시 적 외로움 비율 높아..." (한국리서치, 2018)

## 주목해야할 한국사회 시민 삶의 조건들

### ■ 외로움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

"외로움은 생산성을 66% 떨어뜨린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외로움을 덜 타고 조직에 소속감을 갖게 해야 한다." \_ 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외로움이 영국경제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약 320억 파운드(51조 원)"  
\_ 영국 외로움부 연례보고서

"불안과 우울함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생산성은 해마다 1조 달러(1187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는다" \_ 세계보건기구(WHO)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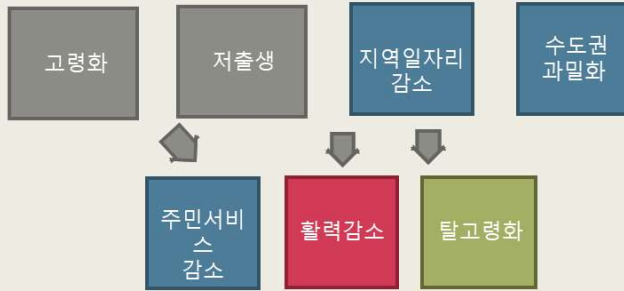
"외로움과 폭력은 '남매 사이'... 분열 폭력 혐오의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있다"  
\_ 비벡 머시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개신교인 3명 중 1명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외로움 느낌" \_ 목회데이터연구소 2013년 조사



## 주목해야할 한국사회 시민 삶의 조건들

### ■ 지역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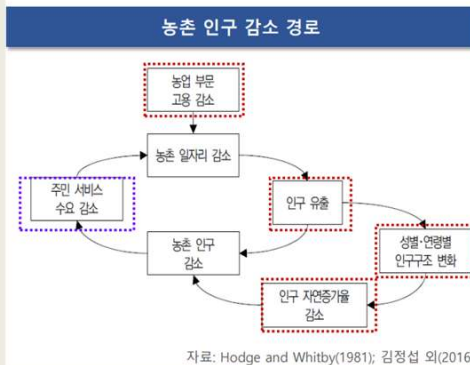
농촌에 남아있던 특정 연령 노인 세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나라에서 보이는 현상)

1985년 40대 후반 농촌에 남아있던 농촌 중심세력, 농촌인구 유출로 비중 증가, 2015년부터 감소, 농촌인구 급감요인

## 지역 인구 감소 경로

### 농가인구 감소가 지역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법

- [경로 1] 농촌인구 감소 → 농촌의 자연인구증가를 감소 → 농촌인구 감소
- [경로 2] 농가인구 감소 → 필수유지 인구 부족 → 자영업 폐업 → 생활서비스 감소 → 인구유출
- 인구 3000명 이하, 병의원부터 철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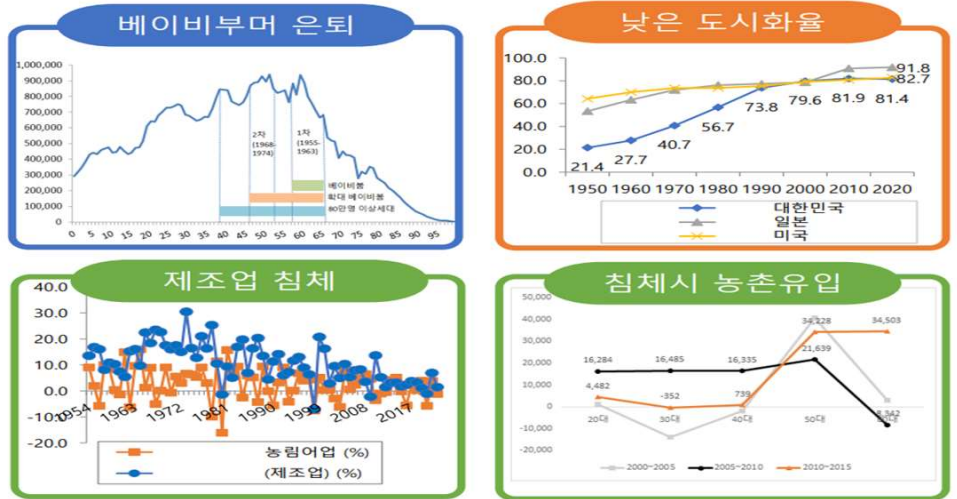
자료: Hodge and Whitby(1981); 김정섭 외(2016)



자료: 농촌경제연구원(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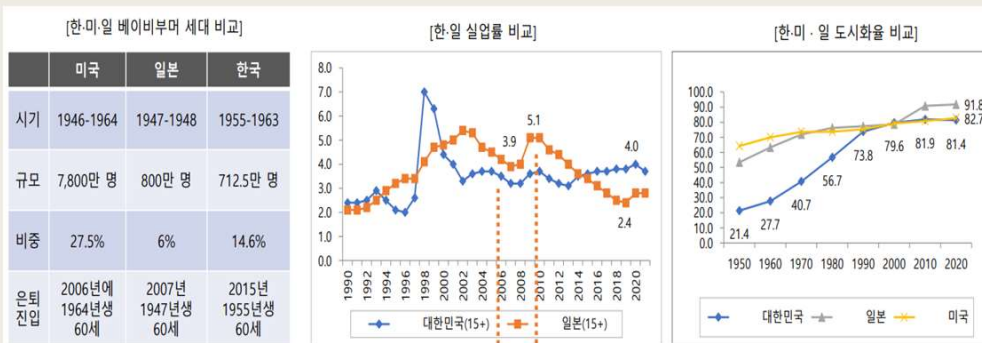
출처: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인생학교의 방향, 김영희(2024)

## 지역 인구 유입의 가능성



출처: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인생학교의 방향, 김영희(2024)

## 지역 인구 유입의 가능성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통계청, OECD 국가 실업률

인구감소한다고 실업을 낮아지는 것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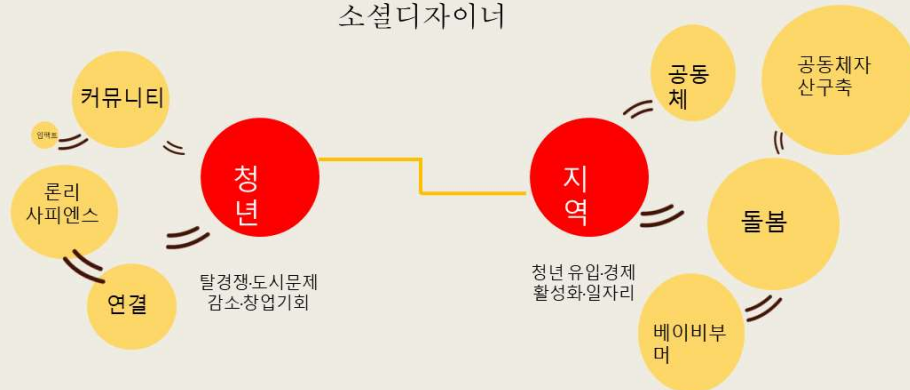
실업을 늘고 지역일자리는 없어 도시화 심화

출처: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인생학교의 방향, 김영희(2024)

#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현장

03

청년X로컬X임팩트  
소셜디자이너



공동체연구소



[발제 2]

##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22대 국회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요청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게 될 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 위기를 고려하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기후 정치를 통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기독교 환경교육 센터가 '그린하트액션' 캠페인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고자, 지금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 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하는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 '그린하트액션'에서 함께 제안하는 내용이고, 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으로 제안된 내용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우선, 국회가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곳이며,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국민의 권리 보호와 위기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배정하여,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정부의 행정 활동을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견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항상 나라와 국민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후 재난 소식이 가득하며, 피해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에 도달한 후 이틀 만에 눈이 내리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는 기후 재앙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기후 위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으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6차 보고서를 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며, 지구를 후손에게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는 필수적 과제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2대 국회가 출발한 것을 돌아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유권자 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62.5%의 응답자들이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는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한국의 기후 유권자 연대는 선거에서 '기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는 후보자를 지지하여 친환경적인 리더십을 선택하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젊은 진보층 일부만의 어젠다'라는 편견과 달리, 기후 유권자는 성별과 연령층에서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남성 35.7%, 여성 31.4%가 기후유권자였으며, 연령 역시 20대(18세 이상),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기후 유권자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럽은 '유럽 그린 딜 2.0'에서 산업 정책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간 녹색 및 기후 기술 경쟁에서 EU가 세계에서 주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유럽외교협회(ECFR)가 최근에 실시한 유럽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큰 위기 중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기후 변화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3억7200만 명 중 7400만 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자신들의 대표가 자신의 생활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가지 말라는 경고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근원을 살피고, 이제라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재앙은 지구의 작은 생명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해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최근 시대가 요구하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가슴에 있는 '그린하트' - 아직 지구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고통을 직시하고, 아직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구의 아픔을 조금씩 아물게 해 줄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를 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지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며,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책과 제안 하나하나에 '그린하트 액션'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후 재앙으로 치닫는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구체적 요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래에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주목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세운 목표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실행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2030년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으로 재설정하고, 2026년까지의 연차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데, 이 센터가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지역의 전문가,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효과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전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세우십시오. 또한,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단위의 주민과 소통하면서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대응 정책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과감한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모든 건물에 '에너지 고효율, 재생에너지 고비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적용하는 등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인센티브, 그리고 손쉬운 건물 보수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데, 지방의 에너지 생산 도시의 주민 건강 악화, 환경 파괴, 일자리 축소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인 연간 88kg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량의 플라스틱 순환은 불가능하며, 해결책은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플라스틱 생산, 관리, 사용, 폐기와 재활용이 잘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기뿐만 아니라 열, 수송 연료 등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회적 갈등, 계통연계 어려움, 입지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모두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며 희망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력이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되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이 펼쳐지고, 또 플라스틱 배출량을 원천 감소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 권장하는 일련의 정책이 실행되는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치 행동을 기대합니다. 국회 안에 기후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 활동이 아닌 국회 안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만은 협치가 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당의 차이를 뛰어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의 주요 사명으로 인식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를 소망합니다. 22대 국회의 활발한 기후위기 대응이 사방에서 기후위기의 풍랑을 넘어서게 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내길 기대합니다.

[발제 3]

## 기독교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_정치

천윤석 (변호사,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



# 기독교시민, 22대 국회에 바란다

천윤석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 22대 국회, 협치 요구 분출?



### 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소통과 협치로 안팎위기 극복해야

한겨레 윤석열 정부, '통합'과 '협치'는 시대적 요구다

동아일보 윤석열, "통합과 협치, 오직 국민 뜻 따르겠다"

### ② 22대 총선 이후

MBC 총선 후폭풍과 "식물 대통령" ... 협치 기로에 선 한국정치

중앙일보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국민의 명령이다

YTN "총선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 野 협치 손 내밀까

경향신문 국정 동력 잃은 윤 대통령, 소통·협치 기조전환 요구 부응할까



## 협치란 무엇인가?



### ① 헌법재판소 2017. 3. 10.자 2016헌나1 결정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권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 ② 학계의 정의

성낙인 "협치란 일응 국가의 통치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정치 내지 통치 ... (중략) ...

협치란 정부와 의회 다수파의 불일치 또는 의회 다수파의 안정적·동질적 다수 확보 실패의 경우에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

허민 "협치를, '국정 행위의 주체가 다자이고 반대자(불일치)가 존재하지만, 국정과제 수행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협의와 타협을 통해 궁극적인 합의를 지향하는 체제 또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 여소야대 - 협치의 조건은?



## 1 민주화 이후 대선 및 총선 결과



## 1 역대 여소야대 사례와 윤석열 정권

- 노태우 대통령 - 13대 국회 3당 합당 → 여대야소로 역전
  - 김대중 대통령 - 15대 국회 의원 빼가기 → 여대야소로 역전
  - 노무현 대통령 - 16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 기각
  - 박근혜 대통령 - 20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 인용
  - 윤석열 대통령
- 행정부의 주도권
- ①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 ② 임기 중반 이후 여소야대 상황 완화 X



# 윤석열 정권 - 야당은 국정 파트너인가?



## 1 22대 총선 이전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① 2023. 4. 4. 양곡관리법 "쌀을 의무 매입하면 공급과잉 유발, 경쟁력 저하"
- ② 2023. 5. 16. 간호법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 초래, 타 직업군과의 갈등"
- ③ 2023. 12. 1. 노란봉투법 "건강한 노사관계 저해. 국민 불편, 국가 경제에 어려움"
- ④ 2023. 12. 1. 방송3법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우려"
- ⑦ 2024. 1. 5. 쌍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특검,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워"  
"특검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⑨ 2024. 1. 30. 이태원특별법 "특조위 권한 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회 분열 심화"



# 윤석열 정권 -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인가?



## ① 22대 총선 이전

###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간 시행령 공포 건수

정 부	기 간	시행령 공포 건수
이명박	2008. 2. 25. ~ 2009. 2. 25.	609
박근혜	2013. 2. 25. ~ 2014. 2. 25.	653
문재인	2017. 5. 10. ~ 2018. 5. 10.	660
윤석열	2023. 5. 10. ~ 2023. 5. 10.	809

대표적인 시행령 정치 사례

- 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② 검찰 수사권 확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윤석열 정권 -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인가?



## ① 22대 총선 이후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① 2024. 5. 21.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야당 일방 통과, 수사중인 사안"
- ② 2024. 5. 29.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자 기준 모호"  
전세사기특별법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 일방 통과"  
농어업회의소법 \* "기존 단체와 중복, 소모적인 갈등 유발"  
한우산업지원법 \* "축종간 형평성 문제"



## 22대 국회의 역할 - 입법권



### ❶ 헌법 규정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❷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 22대 국회의 역할 - 입법권



### ❶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침해

####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다수당 단독 처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파에게 입법권을 귀속시키는 것

#### 시행령 정치

법률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

### ❷ 입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 거부권 행사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시행령 정치

국회법상 대통령령 위법 검토 권한(국회법 제98조의2)만으로는 한계

현행법은 추상적 규범통제 채택 X → 실질적인 통제 어려움



## 22대 국회의 역할 - 입법권



### ❶ 22대 국회의 과제

####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21대 총선 - 20대 대선 - 22대 총선]을 통해 민심이 순차적으로 드러남

권한은 "의무"의 성격을 내포함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하여, 국회의 입법권 해태가 정당화되지 않음

#### 정교한 입법 필요

입법을 정교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입법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임(예 : 검찰청법 제4조)

체계·자구 심사를 엄격히 할 것



## 22대 국회의 역할 - 국정통제권한



### ❶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입법부 → 행정부 견제 수단	행정부 → 입법부 견제 수단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법률안 서명권, 법률안 거부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국무총리등 출석·답변요구권	
긴급명령 승인권 등	
일반사면 동의권 등	

### ❷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현행 헌법상 [입법부 → 행정부 견제수단]이 [행정부 → 입법부 견제수단]보다 강력함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지 않음

다만, [① 편법적인 행정입법 사용], [② 편법적인 권력기관 운영]을 통해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 집중 가능(박용수)



## 22대 국회의 역할 - 국정통제권한



### ❶ 22대 국회의 과제

#### 헌법상 국정통제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것

현행 헌법이 입법부 - 행정부 상호 견제 수단을 불균형적으로 규정한 것은  
1987년 이전의 경험에 토대를 둔 것

22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유권자의 의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

#### 현행 헌법상 국정통제권한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 것

다이내믹한 한국 정치, 기존의 정치 문법만으로 해석할 수 없음

1987년 이후 헌법 현실과 헌법 규범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짐

"윤석열"은 새로운 현상 →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헌법적 문제 야기

규범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규범을 개선할 수 있음



## 22대 국회와 개헌



### ❶ 새로운 시대와 헌법 규범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이후 8번째 정권 → 수많은 헌법적 쟁점 누적

현행 헌법이 담지 못한 다양한 기본권 등장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 부각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헌법규범을 정비할 필요성

개헌은 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

개헌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시점

